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56 호
----------	----------

2019. 9. 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8. 16.
- 나. 회부일자 : 2019. 8. 26.
- 다. 상정일자 : 2019. 8. 28.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안문환 의원

나. 개정이유

우리 조례의 근거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 1. 1.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 운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7. 11. 28.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던 바, 「자원순환기본법」을 우리 조례의 근거 법률로 새로이 삽입함과 동시에 두 개의 상위 법률을 구분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우리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근거 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을 포함시켜 이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근거 규정이 바뀔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안 제2조 ~ 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규정(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전부 삭제하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이하)
- 삭제된 조문을 배제시키고, 전체 13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정비함.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임문섭)

- 의안번호 제15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안문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상호간의 조문 상의 조율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기존 우리 조례의 근거 법률로 명시되었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변경·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먼저, 새로 상위 법률로 등장한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본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어야 할 조문들을 모두 정비함.

- 안 제1조(목적)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였고,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1항은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대체함

※ 유의할 점

기존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하는 법률로, 제2조(구청장의 책무)처럼 일부 조항이 보다 포괄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이동해 감.

※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이유

- ▶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삭제 <2017. 11. 28.>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재활용법」으로 약칭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은 그대로 제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여 혼란을 방지함(안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6조)

나.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실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집행계획**”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률에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률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함.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안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기본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제9조~제12조)에 대해서는 모두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비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합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 1. 1. 시행되어 조례의 근거 법률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이원화(二元化)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하고 중복 부분을 적절하게 정비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